

제185호

발행인: 신현규
발행일: 2014.11.12



발전노동자

- ☐ 민주노조 사수
- ☐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 ☐ 임금체계개악 저지
- ☐ 성과연봉제 저지
- ☐ 해고자 원직복직

공공기관 복지 축소 VS 공무원 연금 축소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1차 마녀사냥이 끝나자, 공무원 노동자들이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행하는 정부와 여당의 논리, 언론의 여론몰이는 공공기관 가짜정상화의 데자뷰(deja vu)다.

공공기관 복지축소를 위해 ‘부채과다 / 방만경영 / 신의 직장’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호도하더니, 이제는 공무원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신의 세금 / 세금 도둑 / 공공의 적’으로 공무원을 몰아세우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자. 1983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연금기금에서 지출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이 총 6조9천734억원이다. 이를 2013년 현가로 환산하면 무려 32조3천613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는 연금부담률이 공무원 7%, 정부 11%이다. 반면 일본은 공무원 7.3%, 정부 23.8%, 미국은 공무원 6.1%, 정부 23.6%이다. 독일은 공무원 부담이

부 당 사 용 내 역	금 액
1998년 IMF 구조조정(11만3천명 감원 퇴직금)	4조 7,169억원
2005년 철도청 공사화(3만 9천명 퇴직금)	2,277억원
1983년~2000년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5,863억원
1983년~1995년 퇴직/유족급여 가산금	1조 4,425억원
합계	6조 9,734억원

없고 전액 정부가 52.5%를 부담하며, 프랑스는 공무원 6.1%, 정부 53.0%를 부담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주원인이 잘못된 정부정책(4대강사업, 공공요금억제, 해외자원개발, 과도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었다면, 공무원연금 부실의 주원인은 정부의 부당사용과 낮은 부담률 때문이다. 제대로 된 책임규명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 공공기관 복지축소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의 대응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

지난달 29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연내처리’를 주문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9월 22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토론회』를 무산시켰다. 11월 1일에는 여의도에서 12만명 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차라리 공무원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라.”며 국민연금과의 차별을 운운하는 정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다. 11월 7일에는 여당이 마련한 면담 자리를 박차고 나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당혹케 했다.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98.64%의 조합원이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했다. 200억원의 투쟁기금을 모아 신문광고를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도로변과 건물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실행행사에 들어간 공무원 노동자들의 결기가 대단하다.

전교조도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학교 담벼락에 “연금을 연금답게, 교사에게 자긍심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연금 개혁을 주제로 한 공동수업도 하기로 했다. 16일까지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17일에 발표하고, 20일부터는 정시 출퇴근 등 2차 준법투쟁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금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에는 파업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행동과 외침에 놀란 나팔수 언론들이 일방적 보도를 자제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임금삭감과 경영평가의 협박 앞에서 무기력하게 항복했던 공공기관 노동자와 달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단결과 투쟁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있다. 2002년 발전노동자의 가열찬 파업투쟁이 국민 여론을 반전시키고 민영화를 저지시켰던 것처럼...

발전노동자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부의 못된 정책 뒤에는 항상 이간질과 갈라치기의 음모가 숨어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시샘하게 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고임금 노동자를 탓하게 하고, 일반 국민들이 노동자를 혐오하게 유도한다. 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비정규직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수준으로 저하되는 것이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는데도 사람들은 쉽게 현혹된다. 귀족노동자, 철밥통, 신의 직장, 역대 연봉은 모두 정부와 자본가들이 만들어내고 유포시킨 말이다. 발전노동자라면, 2002년 민영화저지파업과 최근 공공기관가짜정상화 과정에서 호도된 여론과 무관심이 주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정부 주장대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낮다면, 발전노동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데 찬성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현상유지를 위해 힘을 보태고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공공기관 복지축소가 종착역이 아님을... 이 정권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개악, 구조조정 및 상시퇴출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공무원연금 개악이 관철되면, 정부는 나머지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투쟁은 향후 공공기관 2차 정상화의 강도를 결정짓는 의미가 있다.

모든 노동자의 투쟁이 그러하듯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외면하거나 방관할 일이 아니다.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투쟁을 엄호하자!